

「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강승수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책무(안 제3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
-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(안 제5조)
- 관리자 지정(안 제7조)
- 신고사항(안 제10조)
- 지원(안 11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13조
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6조, 제51조, 제52조

○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5. 26. ~ 5. 31.) 결과 의견없음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(2024. 5. 17. 시행)의 제정에 따라, 구미시의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·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,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등록, 보존 등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으로 지역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안 제6조제3항 등록신청 대상에 대해 조사·검토를 요청하는 ‘관계전문가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바, 시행규칙 수립 시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특히, 지역 여건상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위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,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사전에 파악·관리하고, 위원회 위촉 대상자 풀(pool)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 시행 이후, 관내 다양한 유형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에 따른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 차원에서 관련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안 제11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다루는 문화유산은 ‘등록’ 유산이며, 기존 「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은 ‘지정’ 유산으로 구분됨. 따라서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향토문화유산 조례에는 본 조례에서 다루는 등록 문화유산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문 구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